

“세금은 더 내는데 왜 못받나”... 2차 소비쿠폰, 또 불거진 ‘선별 논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8) 씨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봤다. 이씨는 아직 아이 없이 남편과 딸이 부부 살고 있는 2인 가구. 딸이 있는 경우 가구원 1명을 추가한 특례가 적용돼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액은 42만원이다. 하지만 이씨 부부의 건보료는 60만원이 넘어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씨는 “한 달에 25%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왜 항상 이런 정책에선 제외되느냐”며 “차라리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이해하겠지만, 한 골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정말 실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소득 상위 10%라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 데다 저소득층도 아닌 상위 11% 등 소득 수준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들은 포함되면서 2021년에 이어 또다시 선별 논란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0만원을 추가 신청·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는 달리 소득 상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상위 90% 선별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정부, 소득 상위 10% 뺀 국민 90%에 10만원 지급
고액자산가 우선 제외... 건보료 기준 ‘컷오프’ 정해
상위 10% 중심 불만... “적대시하는 느낌도 들어”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에도 하위 80% 선별 논란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정부는 여기에 나머지 258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 2억3000만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 기준을 놓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를 중심으로

는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데 왜 이럴 때는 항상 배제되는 건지.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관련한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전문직 종사자는 “그렇게 걸러지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내고 있다”며 “차라리 하위 50%만 준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상위 10% 안 주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웃기다”고 지적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극소수인 소득 상위 10%만 걸러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급 대상자인 하위 90%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과 몇 천원, 몇 만원 차이로 소득 상위 11%는 지급 대상이 되고, 10%는 안 되는 것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계층 갈라치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기업 소속의 한 직장인은 “9대 1로 구분해 놓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도 든다”며 “타겟팅해서 차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전 국민의 90%에 게 줄 거면 그냥 나머지 상위 10%도 줘라”, “2차 소비쿠폰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장피할까” 등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선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 상위 20%는 제외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로,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정 기준의 선별이 필요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80% 당시 많은 국민이 배제된다는 문제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90%로 높였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나머지 10%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건 20%, 10%, 5%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고액 자산가 기준이나 건보료 기준에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10%를 제외하는 게 그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할 거면 1차 때처럼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던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지급은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 직장·지역·혼합 가입자별로 각각 건보료 기준액이 다르게 복잡해 당분간 국민의 혼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 대상: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먼저 제외
- 90% 선정: 6월 기준 가구 합산 건보료가 가구별 지역액 이하인 경우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직장	지역	혼합*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690,000	740,000	850,000
8인	690,000	800,000	930,000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다소득원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 예)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 건보료 기준 510,000원이 아닌 600,000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

자료: 정부

이 교수는 “(지급 대상 제외 기준이) 소득 상위 10%이고 재산까지 본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외되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안에 이미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 중복되는 느낌도 있다”고 했다.

정확한 건보료 수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 신청하면 오는 15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22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 불편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10월 31일 종료된다. 1차와 함께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1차 사용처에 더해 지역생협 매장,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까지 확대된다. /뉴스

여야,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이정부 국정운영·검찰개혁 등 놓고 격돌

국회가 오는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정기국회 대비 의원단 워크숍에서 ▲국적(이재명 정부 100일간 달라진 국정·사회·문화 변화상) ▲국익(정상 외교) ▲국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등) ▲국력 증대(AI 3대 강국·국력 5강 국가) ▲국민 혜택(민생회복지원금·추경 집행 실적) 등 다섯 가지 기조 하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의 100일 간의 실정을 부각하고 각 의원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역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야기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질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 첫날인 15일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여야가

與, 국적·국익 등 5대 기조 하에 대정부질문 참여
국힘 “이재명 정부 100일 실정 조목조목 공세할 것”
첫 대정부질문에선 검찰청 폐지 놓고 공방할 듯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사건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재적298인, 재석16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과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부각해 여론전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선 첫 주자로 박성준 의원이 나서며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

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차 의원이 처음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또 신성범·곽국택·유영하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질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뉴스

민주 “한동훈, 특검 출석 회피 말아야... 안하무인 태도”

민주 백승아 “한 전 대표, 검찰 출신 실세...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행위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 태도”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특검 출석 요구를 회피하지 말고 진실을 진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특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정치적 선동 운운하며 ‘할 테면 해보라’는 오만한 입장을 밝혔”며 “한 전 대표는 정권 초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심이자 황태자로 불렸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고 사냥개 노릇

을 한 정치검찰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을 감싸고 내란을 동조했던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내란총리 한덕수와 함께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공동정부 운운하며 국민주권을 전횡하려는 초법적 쿠데타를 기획한 장본인”이라며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범”이라며 “그렇기에 특검에 출석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권력 실세는 더 엄격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으며, 진실을 가로막는 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이 신청한 한 전 대표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하고, 오는 23일로 기일을 잡았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적극 편들고 나섰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의 무능과 무리수를 편들수록 국민들께서는 특검을 ‘민주당 지휘를 받는 하명 수사 기관’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생명을 포기하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에 위법하므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체포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국회로 들어가 계엄해제를 앞장섰다”며 “제가 할 말은 모두 제 책과 다큐, 인터뷰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

진도 아리랑물

우리가족 안심먹거리

Organic & nature

Fresh food 신선한식품

www.jindoairangmall.com

고객센터 061. 542. 9631